소년범 연령 낮아지고 흉포화

소년원 수용연령 10세로 하향조정 추진

7월 광주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설치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범행 내용도 흉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소년의 연령을 10세까지 낮추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7월 광주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설치하는 등 범죄 방지 대책을 11일 내놓았다.

◇저연령 소년범 증가·범행 흉포화=검찰에서 처리된 소년범 수는 ▲2003년 9만6천여 건 ▲2004년 7만2천여 건 ▲2005년 6만7천여 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반면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전체 소년범 중 '촉법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5.4% ▲2004년 21.4% ▲2005년 24.8%까지 뛰어올랐다.

가벼운 죄를 지은 소년범은 경찰이 훈방 조치하거나 즉결심판에 넘긴다는 점에 비춰볼 때, 법원에서 정식으로 심리하는 소년 사건 중 촉법소년 사건이 증가한 것은 12~13세 소년들이 살인·강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

◇촉법소년 연령 낮추고 '집중보호관찰'=법무부는 촉법소년의 하한을 낮춰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바꾸는 소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호처분조차 받지 않았던 만10세~11세 소년들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초단기 소년원 송치('쇼크 구금') 조치에 처해질 수도 있다.

촉법소년들 중 수시로 가출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들을 대상으로 보호관찰관이 직접 방문지도하거나 야간 소재지를 불시에 확인하는 '집중보호관찰제도'도 시행된다.

/서울=임동욱기자 tuim@

▲촉법소년(觸法少年)=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책임능력의 부재로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으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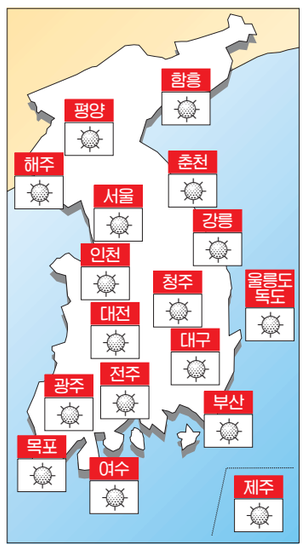
함박눈 속 다정한 연인 광주·전남에 1㎝ 내외의 함박눈이 내린 11일, 젊은 연인들이 광주 충장로를 걸으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2일 광주 낮 최고기온이 11도까지 오르는 등 꽃샘 추위가 한풀 꺾이고,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봄이 오는 길

맑고 낮 부터 기온이 오르겠다.

3월 12일 (음 1월 23일) ◇전국날씨

광주	맑음	-2~11℃
목포	맑음	0~10℃
여수	맑음	0~9℃
완도	맑음	-1~11℃
구례	맑음	-3~12℃
해남	맑음	-3~11℃
장흥	맑음	-3~11℃
고흥	맑음	-3~10℃
순천	맑음	-3~12℃
영광	맑음	-1~11℃
진도	맑음	-3~11℃
전주	맑음	-3~11℃
남원	맑음	-5~11℃
정읍	맑음	-3~10℃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07:21 19:14 썰물 12:24 --:--
여수 밀물 01:31 13:18 썰물 07:38 19:37

▲해뜸 06:48 ▲해짐 18:37 ▲달뜸 01:38 ▲달짐 11:0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3(화)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날 씨						
최저/최고	0/13	1/14	5/10	4/9	1/10	1/11

새학기 학교폭력 집중 단속

전남경찰청 6월까지

전남지방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12일부터 6월11일까지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최근 학교폭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폭력 동영상 촬영 ▲피해 학생들의 신고 기피 ▲저연령화 및 여학생 폭력 증가 등의 문제점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 폭력 피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학교 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문자 선도 시스템'과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는 '애플 레터'(Apple letter) 운동 등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자진 신고한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와 협의, 최대한 선도 조치하고 신고 피해 학생에게는 ▲철저한 비밀 보장 ▲타학교 전학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 치료 등의 후속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신고는 각 관할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 전화, 편지로도 가능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초·중생 30% "학교폭력 경험"

초등학생과 중학생 10명 중 3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습지 전문업체 ㈜노벨과 개미와 ㈜교수닷컴은 최근 초·중학생 온라인 회원 1천11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30%인 301명이 학교폭력에 시달린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해 2월 실시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학교폭력 경험' 응답률 26%에 비해 4%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학교폭력을 당한 횟수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네 차례 이상'이라는 답변이 13%로 가장 많았고 ▲한차례 11% ▲두 차례 5% ▲세 차례 1% 등이었다.

또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됐나?'란 물음에는 '매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26%,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14%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40%에 달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김원본 前 광주시교육감 별세

반세기 가까이 교직에 몸담으며 '실력 광주'의 명성을 쌓는 데 공헌한 김원본〈사진〉 전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10일 새벽 0시20분께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장성 출신인 고인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문리사범대학을 졸업, 1958년 담양 한재중 교사로 교직에 입문한 뒤 1975년 목포시교육청 장학사를 시작으로 광주시교육청 장학사·장학관·중등교육과장·부교육감 등 교육전문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민선 2대·3대 광주시교육감을 연임하면서 8년의 임기 동안 '실력 광주' '교육정보화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해 지역 공교육 발전에 기여했다.

빈소는 조선대 장례식장(220-3353)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2일 오전 9시, 장지는 장성군 삼서면 선영. 유족으로는 미망인 정판림(71)씨와 3남이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법정 전염병 발견해도 '나 몰라라'

지역 보건소 즉각 신고 의사 15% 불과

법정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더라도 해당 지역 보건소에 즉각 신고하는 의사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전국 의사 1천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의사만이 전염병 환자 발생을 즉각 신고한 반면 65.6%는 '진단이 확실할 때까지 기다려 본 뒤 신고한다'고 응답했으며, 18.4%는 '아예 신고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다.

의사 업무를 하면서 전염병 발생 시 즉각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질병의 진단이 불확실해서'가 45.7%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신고하기가 귀찮아서(15.3%) ▲신고 절차를 몰라서(10.5%) ▲신고 이후 보건당국의 간섭 때문에(10.4%) ▲법정 전염병인지 몰라서(5.6%) ▲신고해 봐야 도움될 것이 없어서(4.5%) 등의 순이었다.

법정 전염병에 대해 보건소로부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의사는 23.6%에 불과했고, 신고 서식 및 신고 지침서 비치율도 각각 60.4%, 56.8%에 그쳤다. 특히 66.8%는 법정 전염병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연합뉴스

▲법정 전염병(法定傳染病)=병의 예방·전염방지·치료를 위하여 국가가 법령으로 지정한 전염병. 콜레라·페스트·장티푸스·세균성 이질·말라리아·홍역·일본뇌염·간염·황열·뎅기열 등 전염성이 강한 65개 질병이 해당된다.

"뱀사골 대피소 폐쇄 안된다"

산악인들 "안전 위협" 백지화 촉구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북부사무소가 오는 5월 말까지 뱀사골 대피소〈사진〉를 폐쇄하기로 하자 산악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리산 북부사무소는 뱀사골 대피소가 시설이 낡고 이용객이 적은데다 계곡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5월 말까지 폐쇄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뱀사골 대피소는 등산객 보호를 위해 1985년 뱀사골계곡 상류에 50평 규모로 세워졌으며 연간 5천7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지리산 북부사무소는 "대피소가 뱀사골 상류에 있다 보니 등산객이 집중되는 여름철이면 각종 음식물쓰레기로 뱀사골 계곡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산악인들과 탐방객들은 그러나 "인근에 이를 대체할 만한 대피소가 없는 상태에서 뱀사골 대피소를 폐쇄하는 것은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 산악연맹은 "뱀사골 인근에서 연간 10여 건의 조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뱀사골 대피소와 가장 가까운 노고단 및 연하천 대피소는 각각 6.5km, 4.2km 떨어져 있어 조난사고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오염을 이유로 대피소를 폐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